

## POLITICS

## 기업도시 세제 감면…‘솔라시도’ 투자유치 탄력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 성장 유망 중기 31개사 발굴 시, 맞춤형 금융·세제 등 지원

광주시는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겸비한 지역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매년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집중 지원하는 광주시 대표 기업지원 사업이다. 현재까지 400여 개사가 선정돼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광주시는 총 31개사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 규모에 따라 프리(Pre)-명품강소기업(13개사), 명품강소기업(18개사)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선정 조건은 프리(Pre)-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지식서비스산업은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이면서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3% 이상인 기업이다.

명품강소기업은 매출액 50억원 이상(지식서비스산업은 10억원 이상) 이면서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5%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달 23일까지 모집한 후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현장평가를 거쳐 7월 말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선정된 기업에는 지원서와 현판이 수여된다.

평가는 기술 수준, 성장전략, 연구개발(R&D) 혁신여력, 이에스지(ESG) 경영준비 등 정성평가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 이에스지(ESG) 진단·상담을 받았거나 광주시 탄소중립 정책에 참여한 기업에 우대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제품 기획부터 시제품 제작, 고급화까지 다양한 맞춤형 협업·자율 지원이 제공되며, 광주시 경영안정자금(3억원→5억원 상향) 등 금융·세제·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향후 지역 혁신선도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광주테크노파크 기업육성팀(062-602-7222)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누리집의 고시공고와 광주테크노파크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나순 창업진흥과장은 “명품강소기업 육성사업은 광주의 지역경제를 이끌 핵심 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밸류”이라며 “성장 가능성과 혁신역량을 갖춘 지역기업들의 적극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전남도 건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영암·해남 적용

## 입주 기업 5년간 재산세 분리 과세로 세제부담 완화

전남도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투자한 기업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대폭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와 영암·해남군이 산업용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 실현을 위해 국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세연구원 등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반영된 데 따른 것

이다. 행안부가 지난해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용역 대상 과제로 선정, 1년여간 용역, 현지실사 등을 거쳐, 올 3월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 산업용토지에 대해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솔라시도 기업도시(영



암·해남)와 태안 기업도시가 적용받게 된다.

기업도시 산업용토지 재산세 과세기준 일인 6월 1일에 맞춰 시행되며, 재산세의 경우 기준 종합합산 과세 0.2~0.5% 누진

세율에서 0.2% 단일세율로 적용되고,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효과도 있어 입주기업의 기반이 마련돼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솔라시도에 구축

예정인 ‘인공지능(AI) 슈퍼클러스터 허브’와 친환경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한재생에너지100(RE100) 산업용지 조성 등 산업기반과 연계해 기업도시 발달을 이끌 시너지를 창출할 전망이다.

서순철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기업이 투자를 고려하는 요건 중 하나가 세제 혜택”이라며 “지금까지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감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기업 투자유치 촉진, 기업도시 조기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2025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 서왕진 “대법, 지귀연 사건 엄중 감찰하라”

## “지 판사 사건 배당 제외하고 철저히 살펴야”



발생한 노동자 끼임사망사고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는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인가”

라며 “이쯤 되면 사고의 원인은 현장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 경영 전반의 시스템

록지 판사는 아무런 해명을 내놓지 않았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역시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표는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확정 지은 천대업 법원행정처장의 전력을 언급하며, ‘김 전 차관은 결국 1억 3000만 원이 넘는 형사보상금을 받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법원이 ‘지귀연 판사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귀변으로 국민을

해결법률을 강화하고, 시행령도 정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어 SPC에서 또다시

부실과 책임 회피에 있다”고 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은 ‘악법’이며 ‘사람이 죽은 뒤 사업주를 처벌해서 뭐가 바뀌느냐’는 김문수 후보의 당언은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고, 시행령도 정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표는 “이번에도 법원이 ‘지귀연 판사임을 특정할 수 없다’는 귀변으로 국민을

해결법률을 강화하고, 시행령도 정부와 협의하여 실효성 있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후보는 대선 후보인 김문수 의원은 지난 20일 “저는 이 후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며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이런 러브콜을 일축했다.

김용태 “큰 틀서 함께”…안철수,李 현장 방문 윤여준 “김문수, 미련 뜻버려…명분없는 야합”

광주와 대구 공직자들이 3년 연속 고향 사랑기부로 ‘달빛동맹’의 연대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로 3년째 맞는 ‘달빛동맹 상호 기부’는 2023년 100명, 2024년 122명에 이어 올해 320명의 공직자가 자발적으로 고향 사랑기부에 참여했다.

두 도시는 각각 5·18민주화운동과 2·28민주운동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와 인권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난 수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이 같은 교류·협력은 2023년 공항특별법 통과, 2024년 달빛철도 특별법 제정, 남부거대 경제권 조성 협약 체결 등으로 이어지며 실질적 동서화합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고향 사랑기부 또한 두 도시 공무원들이 ‘고향 사랑e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상대 도시에 기부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간 연대와 공감,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고향 사랑기부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향 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단체품을 받을 수 있다.

강기정 시장은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이번 고향 사랑기부가 따뜻한 동행이자, 지속할 수 있는 상생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포용도시’ 광주, 세계인들과 문화축제 즐긴다

## 시청서 24일 ‘세계인의 날’…15개국 문화·음식 체험

광주시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시청 1층 시민홀에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세계인의 날’(5월 20일)은 재한외국인과 국민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이번 행사는 ‘제60회 시민의 날’과 연계해 열리며, 강기정 시장과 신수정 시의회 의장, 이정선 시교육감, 주한 외국공관 관계자,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다문화가족, 재외동포, 내국인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할 예정이다.

현장을 찾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캄보디아·필리핀 대사관의 영사서비스가 제공하며, 이후민건강센터 등 지원기관에서는 현장 고총상담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 국민의힘, 단일화 구애 총력…이준석은 손사래

국민의힘은 21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 단일화 물꼬를 토기 위해 당력을 집결했으나 이 후보는 단일화 제안에 거듭 손사래를 쳤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지지율과 관련한 특단의 대책을 묻자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과 정책도 다르지 않다”며 “이 후보는 마지막에 저와 단일화해, 훌륭하게 대선 승리를 이끌 주역이 아닐까 생각하고, 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이 후보를 향해 “우리는 결국 힘을 합쳐야 한다”며 “보수·분파가 고쳐 쓸 수 없는 집이라면, 그 자리에 더 좋은 집을 새로 짓겠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에서 이 후보와 만나게 됐다. 국회에서 기

자들이 이에 대해 물으니 “아직 언론에 공개할 정도의 대회를 나누지 않았다. 계속해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다만 (대선 후보) TV토론을 봄도 알 수 있듯이 이 후보가 말하는 가치나 공약이 김문수 후보가 말하는 가치나 방향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많은 국민이 인정하실 것”이라 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와) 계업과 독재에 반대한다는 큰 틀에서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선거 레이스가 진행 중이니 지켜봐 주면 좋겠다. 저도, 이 후보도 큰 틀에서 여러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단일화 성사의 ‘마지노선’이 언제인지를 묻자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투표용지 인쇄(25일 시작) 전이든지, 선거일 직전이든지 단일화 성사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을 비판하면서 김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또 다시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선거일을 10여 일 앞두고도 불리한 판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김 후보는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인 안철수 의원은 이날 이 후보의 가천대 학생 식당 방문 행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이 후보 설득에 나섰다.

안 의원은 지난 20일 “저는 이 후보의 상처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고 진정으로 도와드릴 수 있다”며 후보 단일화 논의를 위한 회동을 제안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이 후보는 그러나 이런 러브콜을 일축했다.

김용태 “큰 틀서 함께”…안철수,李 현장 방문 윤여준 “김문수, 미련 뜻버려…명분없는 야합”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하자며 전화를 많이 걸어온다. 대부분이 친윤계 인사들”이라며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서 당을 먹어라’는식의 말을 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윤여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지금 내부·극우세력이 총결집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 후보에게 연일 덕담하며 후보 단일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아무런 명분 없는 야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모두 반명(반아제명) 빅텐트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반명은 빅텐트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또 “극우 내란 세력의 집권 연장과 윤석열 무죄 만들기 목표일 뿐”이라며 “빅텐트가 아니라 빙텐트, 찢어진 텐트라는 것을 국민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